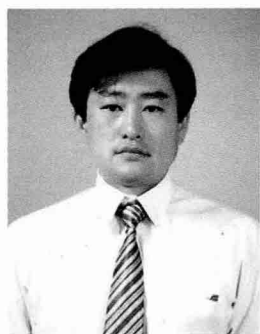


침체일로를 달리는

우리의 방위산업

어디서부터 풀 것인가



姜昌淳
商工部 방위산업과장

「방위산업체가 기술개발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업이 또는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상세히 밝힐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제까지 토론회에서의 발표와 학술지에서의 논문 등은 거의 모든 최선의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 문제를 풀어나갈 주체로서 기업과 정부관리들이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안보와 자주국방의 달성을 위해 국가적인 보호와 육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방위산업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중 누구도 이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 상대적으로 우리 방위산업계가 민수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뒤쳐지고, 기업가는 위기감을 느끼며, 일부 학자는 국민경제에 부담을 준다고까지 평(評)하여 방위산업계에 고독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인가?

문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경제성장의 주체인 제조업의 일각을 받쳐주고 있는 중공업에 횡(橫)으로 가로놓여 있는 각 공업부문의 집합이며, 한때는 이 관련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주체였으나, 현재는 민수부문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훨씬 성장해 버린데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자체가 방위산업의 성장에 장애(障礙)일수는 없으며, 오히려 70년대의 육성전략이 훌륭히 성공해 민간산업에까지 미쳤었던 파급효과를 이제 되돌려 받음으로써, 방위산업의 제2도약을 위한 에너지가 되어 주고, 경기사이클의 양(良)의 변수가 되어주는 것이 타당했을 것이다.

그러한 반면 방위산업체는 기술개발 등 각종 투자와 마케팅, 경영체질 강화 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방위산업의 주변 지원기관은 전혀 달라진 기업여건을 감안하지 않은채, 과거의 지원방식을 대부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 연구개발 동기나 경쟁을 통한 경영체질 강화의 바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산업으로서 보다는 안보에 치중한 각종 기업관리체제로 인해 때로는 기업의 활력을 억제하는 경우마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친 개방의 결과로 국내기업여건 뿐만 아니라 대외통상(對外通商) 측면에서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경제성장의 궤도를 달리고 있을뿐 아니라, 이제 우리경제의 규모가 커짐으로써 경제성장 형태도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된지 이미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있다.

즉 이제는 국가적 이익의 보호에도 국민의 합의가 요구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재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 국민과 경제계 일반 사람들의 일관된 생각은 우리나라의 부(富)의 축적은 농업도 서비스업도 아닌 제조업을 통해 이루어질수밖에 없고, 서구(西歐) 공업국과 일본 등의 자원빈국(資源貧國)과 같이 소득향상은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산업의 육성에 직결돼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이렇게 볼때 방위산업은 산업육성 측면에서도 틀림없이 고도기술산업이며, “고도의 기술과급 효과와 고부가가치 산출을 유지하는 한에는” 선진공업국의 실현을 위해 육성이 당연시 되는 부분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방위산업에 대한 인식전환과各界의 의견을 수렴해보기 위한 「방위산업대토론회」가 6월 21일 성황리에 열렸다. 국내최초의 공개토론회였던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보다 다소 우위에 설 정도의 무기체계 획득에 주안점을 두어 방산업체들의 축적된 기반기술을 활용하며,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자는 이야기는 心罫을 울렸다

방위산업체는 기술개발 등 각종 투자와 마케팅, 경영체질 강화 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방위산업의 주변 지원기관은 전혀 달라진 기업여건을 감안하지 않은채, 과거의 지원방식을 대부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 연구개발 동기나 경쟁을 통한 경영체질 강화의 바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산업으로서 보다는 안보에 치중한 각종 기업관리체계로 인해 때로는 기업의 활력을 억제하는 경우마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어느 산업이나 기술력이 최우선의 확보과제가 되어, 국가적으로도 기술변화는 경제성장에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으며, 기술개발은 이제 생존경쟁의 양상을 띠게 된 것이 현실이다.

물론 기술의 영향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



여러 다른 제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위산업에 대해서도 한정된 기술 개발자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한정된 기간내에 핵심기술을 개발, 자체 확보해나갈 종합적 프로그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느냐 보다는 우선 무엇을 언제까지 하느냐 부터가 정확히 도출되어야 낭비적인 투자없이 목표를 향해 가장 단거리로 항진할수 있는 나침반 구실을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다. 단지 그 진보속도가 경제의 순환보다 느렸던 과거에는 기술을 외생적인 선택의 대상으로 다루어도 큰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반도체를 비롯한 정밀전자기술과 같이 기술의 변화 주기(周期)가 2~3년으로 단축되면서 기술은 시장에 가장 극심한 교란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기술적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생산과 시장의 형태조차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방위산업의 경우 먼 옛날 정기스칸이 기마대 경량화를 성공시킨 생산기술로부터

최근 걸프전의 첨단전자전에 이르기까지 이 산업의 존재가치는 기술력에서 상대편을 압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성장이 무한하고 마케팅전략도 자유롭게 구사할수 있는 민수분야가 기업에는 더욱 매력을 줄수 있으나. 이와같은 방위산업의 속성장 기술을 남에게 의존하고 자체개발에 태만하다는 것은 방위산업에 종사하는한 이윤배반적인 기업정신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방위산업의 기술력은 산업으로서의 존재의미와 직결되고, 전술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그러면 기업의 투자 의지를 북돋아주고, 방위산업체가 만년(萬年) 지원대상이 아니라 건강하게 자립하여 중공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할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지금 여러 다른 제조업은 국내의 악화된 기업여건, 치열해가는 국내의 시장 경쟁과 외국의 기술보호주의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은 9백 19개의 핵심기술과제와 2조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집중 지원해서 5년 이내 선진국의 기술수준을 따라잡겠다는 것을 그 골격으로 하고 있다.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완료한 회사들에 대한 정부구매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의 정착은,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정부로서는 기업에 대한 당연한 상응조치로서, 여러 다른 지원과 함께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다. 사진은 금성정밀이 자체기술로 개발한 첨단 방공무기체계인 GLAS-830M 저고도 사격 통제 레이더



이것은 방위산업과 마찬가지로 선진국에 대한 기술적 열세와 후발국에 대한 임금(賃金)경쟁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자기구책(自救策)으로서 수립된 것이다.

방위산업의 주어진 주변여건이 다른 산업에 비해 불리하다 하더라도, 그럼으로써 더욱 주어진 투입량으로부터 생산할수 있는 산출의 최대치를 높이기 위해 기술의 진보는 늦출수 없는 기업활동이다.

여러 다른 제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위산업에 대해서도 한정된 기술개발자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한정된 기간내에 핵심기술을 개발, 자체 확보해나갈 종합적 프로그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느냐 보다는 우선 무엇을 언제까지 하느냐 부터가 정확히 도출되어야, 낭비적인 투자없이 목표를 향해 가장 단거리로 향진할수 있는 나침반 구실을 해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우리기업들은 우선 가시(可視)적인 국내시장을 위주로 제품과 기술의 국산화를 조속한 시기내에 추진한뒤, 자체기술 개발과 해외 마케팅 능력을 배양하여 세계시장으로까지 영역을 점진적으로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이때에 정부는 방위산업에 대한 결정적인 지원수단이요, 또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정부보호하의 내수시장인 군수자원 조달이라는 지원기능을 방위산업의 장기적인 육성의 안목에서 가장 유효 적절하게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기업이 기술개발에 관한한 자유롭게 정부와 연구소가 보유한 Know-How, 인력, 설비 등을 활용할수 있도록 현존하는 각종 제약을 완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완료한 회사들에 대한 정부구매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의 정착은,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정부로서는 기업에 대한 당연한 상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계획 수립의 경우 1년여에 걸쳐 수백 명의 전문가가 동원되었고, 모든기업이 기업비밀에 관계없이 보유기술과 취약기술을 조사안에 공개하였다. 여기에서 추출된 핵심기술 수요(919개)가 나온 뒤에야 비로소 상공부는 제조업을 목표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부문을 지원해야 하는지의 방향을 잡을수가 있었고, 소요자금, 분야별 인력과 도입 혹은 자체개발 등 기술확보 방법에 대한 마스터프랜의 수립이 가능했었던 것이다

응조치로서 여러 다른 지원과 함께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다.

사실 「방위산업체가 기술개발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업이 또는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상세히 밝힐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제까지 토론회에서의 발표와 학술지에서의 논문 등은 거의 모든 최선의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 문제를 풀어나갈 주체로서 기업과 정부 관리들이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세를 더해가는 기술보호주의(요즈음은 기술쇄국주의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UR, 지적소유권의 집요한 보장요구 등의 대외적 압력은 이제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게 한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되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방위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결연한 자세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나가야 할 것이다.*